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4-152호

「선원법」 제44조(선원명부의 공인) 제3항에 따른 승하선 공인을 받지 않은 선박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179조(과태료) 제3항제6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선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1.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선명	주소
고*성	79.10.12.	제66선*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로162번길

2. 과태료 부과 사유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 과태료 부과 사유의 원인인 되는 사실 : 선원명부 미공인(기관장 김*수의 승선 미공인)
- 근거법령 : 「선원법」 제179조(과태료) 제3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및 납부기한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60만원
- 납부기한 : 2024.12.31.(화)

4. 안내사항

- 과태료 납입고지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서 발급받아 납부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습니다.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60개월간 징수하며,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압류-매각-청산)에 따라 강제징수 합니다.
- 문의사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제주시 임항로 128 / 064-720-2638)